

<서평>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흔들리는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고성준

(제주대 교수)

I. 흔들리는 남북한 화해·협력시대

7월 5일 발사한 북한 미사일 사건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제적으로 유엔안보리가 전원찬성으로 대북비판결의를 했다. 유엔뿐만 아니라 G8(선진7개국 +러시아)회의,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등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와 비난이 모여져 북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더욱 자초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홍수피해가 심각해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금년 봄부터 준비해 온 「아리랑」 공연을 취소할 정도인데 과연 국제사회가 지원에 나설까 하는데는 부정적이다. 또한 그동안 북한의 후원자를 자임해 온 중국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으며 이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식량과 에너지 지원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게 되었다.

국내적으로 북한의 미사일발사가 주는 충격은 가히 폭풍에 비유할 수 있다. 우선 지난 2000년 6월 남북한의 정상이 만나 합의한 「6.15선언」 이후 쌓아온 남북한 화해·협력의 축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지난 2000년 6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에서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이제 남북한 사이의 전쟁의 공포는 사라졌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그 후 남북한 관계는 제로-섬 관계의 적대적 공존에서 벗어나 화해·협력 관계의 새길을 걸어왔다. 당시 국민의 정부는 이른바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체제의 변화와 세계로의 편입을 시도해 왔다. 경제적으로 낙후와

침체에 빠진 북한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선 것이다. 식량과 비료 등의 지원에서부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사업에 이르기까지 각종 대북교류·협력사업이 날로 확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북한당국도 이에 화답을 하며 당국간회담을 비롯 심지어 가시적인 남북실무군사회담의 개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남북대화채널을 유지했다. 또한 정치적 부담이 있어 내심 꺼려온 이산가족상봉도 허용했다. 군사기지인 금강산의 장전향과 개성도 경제협력을 위해 철거했다. 남북인사교류도 활발히 전개되어 주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이었다 하더라도 작년 북한의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을 보러간 남측인원이 7000명을 웃돌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2002년 6월의 「서해교전」과 같은 악재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남북 교류와 협력이 위와 같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일부에서는 ‘한반도 통일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통일시대론’, ‘통일 낙관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북한이 미국이 가해오는 각종 제재로부터 벗어나고 나아가 미국과 관계개선을 위한 정치적 선택과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는 남북한 관계에 대한 충격은 실로 큰 것이다.

우선 북한의 미사일발사는 핵에 이어 이 자체가 협상카드가 되었고, 기존의 한미관계와 한일관계에 큰 흠집을 내면서 향후 한국의 남방3국 관계축에 큰 충격을 가하고 있다. 또한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구해 온 남한정부의 외교적 선택의 폭을 제한시켜버렸고, 핵과 미사일기술에 우위를 가진 북한이 남한에 대해 군사적 우위를 점하게 되었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이렇듯 북한은 남한의 외교적·군사적 입지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남북한 화해·협력시대의 흐름 속에 매몰되어 있던 「한국안보」 문제가 다시 남한사회에서 부상하게 되었다. 2000년 6월 이후 전개되는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에 「피주기」 논쟁을 비롯 남남 갈등이 있었으나, 그동안의 남북관계의 발전으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다시 부상하게 되었고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대북화해·협력을 추진해 온 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 민간

단체들의 활동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제 남한사회는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에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입장에서부터 조건부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채택 등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흐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야당의 대권전략이라거나 일부 소수 보수언론 내지는 단체들의 부분적 행동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평범한 남한 사람들의 생각의 표출이라고 여겨야 한다. 이점을 북한당국이 간과해서는 「민주사회」이고 「참여사회」인 남한에서 진정한 한반도의 「화해·협력」을 위해 애쓰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의 선택을 더욱 더 좁게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점이다.

II. 분단체제의 동요와 6·15시대

한반도 분단 극복을 위해서 분단체제론적 접근을 강조해온¹⁾ 백낙칭 교수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 위원회 상임대표」로 공동선언의 이행에 앞장서 오면서 민족통일을 위한 실천에 경험을 토대로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이라는 저서를 출간했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이루어진 남북한 관계 특히 민간교류의 확대를 6.15 시대의 실체로 보고 이의 규명을 이 책을 통해 하고 있다.

그는 일찍이 분단현실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시·공간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가 찾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남북국가간이나 상반된 이념간의 대립위주로 인식하기 보다 한반도 전역에 걸쳐 작동하는 어떤 복합적인 체제와 그에 따른 다수 민중의 부담”²⁾이라는 차원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분단이 남북한에 사는 주민에게 주는 불이익을 볼 수 있고 남북한 당국과 기독교력의 적대적 의존관계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1) 백낙칭 교수는 이미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1994)와 「흔들리는 분단체제」(1998) 등의 저서를 통해 한반도 분단 극복과 분단체제론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왔다.

2) 백낙칭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서울, 창비, 2006, p.45

또한 분단의 체제론적 설명은 한반도의 분단구조가 일정한 자생력과 안정성을 갖고 있음을 깨우쳐 준다는 것이다.³⁾

그렇다면 분단체제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백교수는 한반도가 체제로서의 분단이 1945년의 지리적 분단과 더불어 저절로 자리 잡은게 아니고 1950년의 「6·25」가 53년 휴전이라는 교착상태로 끝남으로써 그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⁴⁾

그 후 53년부터 60년까지를 분단이 체제화되는 진통기로 보고 4·19혁명을 무력화시킨 5·16쿠데타 이후 분단체제가 자리잡게 된다는 것이다. 그 후 군부통치와 제3공화국은 남한에서 분단체제가 안정성을 갖는데 기여했고, 유신 정권기를 거쳐 제5공화국 분단체제를 강화했으나 5·18 광주민중항쟁을 무력으로 탄압하여 분단체제를 동요케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분단체제는 통일을 열망하는 한반도 주민 절대다수의 바람을 부정하기에 본질적으로 반민주적이며, 비자주적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남한에서의 1987년 6월 항쟁과 그 후의 민주화로의 흐름은 반민주적인 분단체제에 대해 타격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 무렵 소련에서는 고르바췌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추진되었고 이는 소련체제의 강화가 아닌 소련체제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었고 동구사회주의 진영에 대변혁의 화오리가 불어 분단국가인 북한에도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백교수는 교착되어 온 한반도 분단체제가 동요하기 시작한 것은 1987년을 기점으로 보고 있으며, 그 예로 남한의 경우 노태우정부가 전개한 북방정책과 91년 채택된 남북한 기본관계합의서를 들고 있다.⁵⁾ 북한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무산되었지만 남북정상회담(1994)이 이루어졌다면 분단체제는 크게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교수는 96-97년 남북한이 다른 원인으로 겪게되는 경제적 위기가 분단체제를 크게 흔들었으며, 2000년 6월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은 한반도 분단체제의 동요를 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3) 상계서

4) 상계서 p.46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분단체제의 형성과 강화 그리고 동요의 50여년에 대한 서술은 한반도 분단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2000년 6월에 있게되는 최초의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이 이루어지는 배경 특히 남북한 각기 처한 상황과 정책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없이 6·15시대를 서술하고 있다.

우선 남한의 경우 분단체제가 굳어져 오는 과정에 있었음에도 3공화국부터 전개해 온 남북한 사이의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자리매김하려는 대북정책의 전개는 분단체제에 변화의 움직임을 주려해 온 것이다. 대내적으로 반민주적이고 비자유적인 3공화국에서 5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대북평화지향정책은 체계를 갖추어 왔고 민주성을 갖게되는 6공화국부터 더욱 더 박차를 가하게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하나는 북한의 경제난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백교수는 1996-97년에 겪게되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예로 들고 있으나 사실 남한정부를 배제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만을 고집해 온 북한이 남한정부를 인정하고 남한정부와 화해의 손을 잡게 되는 것은 심각한 경제난과 이를 지원해 줄 국가가 남한뿐이었다는 현실이 아닌가 한다. 북한의 대남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이종석 박사는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탈냉전의 진행 그리고 북한 내부의 자원고갈과 남북한 역량 격차심화”를 들고 있다. 90년을 전후한 소련, 동구의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과 냉전의 종식은 냉전시대에 길들여진 북한에게 엄청난 시련과 도전을 안겨주었다. 경제적 파트너였던 소련과 동구권의 부재는 자력갱생식 사회주의 제도의 고수에서 오는 만성적 경제자원의 고갈을 더욱 부채질하여 이념적으로 적대국가인 미·일 등 자본주의 국가에서 지원을 구해야되는 상황으로 내몰게 되었다. 그러나 남한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왔고 IMF의 경제적 시련도 남한주민의 단결속에 극복하면서 남북한간의 경제격차는 크게 벌

6) 상계서 p.48

7) 이종석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북한의 대남정책변화”, 계간「사상」, 2000 가을호 P.118

어지게 되었다. 이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면 동독처럼 서독에 흡수통일된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음을 북한당국은 인식하게 되었다. 이제 북한은 남한의 공산화에 주력하기보다는 그 동안 유지해온 체제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절실한 당면과제가 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북한 '공조'를 통해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⁸⁾

또 하나는 소련의 붕괴이후 슈퍼국가가 된 미국의 위협을 '남한과의 공조'로 막아내자는 전략적 선택을 들 수 있다. 북한은 90년초 붉어진 북핵문제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기 시작했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남한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택하게 된 것이다. 즉 북핵문제를 한반도에서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조로 전환하여 대미항전에 남한을 연계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화해협력의 손을 내미는 남한당국과의 회담에 응하게 된 것이다.

Ⅲ. 남북화해·협력시대는 「한반도식 통일」의 시작인가?

백교수는 2000년 6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6·15 선언이 흔들려온 분단체제가 허물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면서 「6·15」 시대라는 「한반도식 통일」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우선 백교수는 6·15 선언이 지난시대 남북한이 합의하에 발표한 7·4공동성명(1972)과 남북기본관계합의서(1991)와 비교하여 획기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⁹⁾ 첫째로 6·15 선언은 남북한의 최고정상이 직접 만나 합의하고 서명한 최초의 문건이기에 실천력이 강하다. 또한 남한은 평화적 정권이 이루어졌으며 민주화가 활발히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어 74 공동성명과 91년의 남북합의서 채택시의 정치적 현실과는 달리 훨씬 든든한 현실적 기반이 전제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¹⁰⁾. 둘째로 6·15 선언의 2항

8) 전현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통일연구원 정책보고서(2006.5) p.5

9) 백낙청 전계서. p 17.

에서 보여주듯이 7·4 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원칙이나 남북기본관계합의서가 담고 있는 7·4 공동성명의 진일보한 통일로 가는길의 제시와는 달리 일견 모호하고 제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¹¹⁾ 또한 백교수는 모두에게 부담을 덜 주고 실질적인 신뢰구축작업을 언급한 6·15선언의 제4항은 실천에 옮기는 가능한 통일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의의를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¹²⁾

백교수는 한반도의 통일은 무력통일 방식의 베트남 통일이나 급격한 흡수통일의 독일통일과는 달리 평화적이고 점진적이며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¹³⁾ 또한 통일의 개념도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단일국가로의 '완전통일'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과정으로서의 통일에 중점을 둔 교류를 통한 실질적 통합으로 보자는 것이다. 그 속에서 어느날 문득 '어 통일이 됐네, 우리만나서 통일됐다고 선포해 버리세'라고 남북이 합의하면 그게 「한반도식 통일」이며 1단계 통일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¹⁴⁾ 백교수는 6·15 선언 이후 남북한 사이에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2005년 6월 14일부터 있었던 평양에서의 6·15 기념 공동행사와 8월 15일 서울에서 있었던 광복절기념 공동행사가 당국과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축제로 끝을 맺은 2달간에 남측 민간공동대표로 참여하여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진수를 보았고 이를 「6·15 시대」의 참모습이요, 「통일시대」의 들머리라고 평하고 있

10) 상계서 2항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11) 백교수는 “7·4 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원칙 즉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은 모두가 타당한 것이지만, 통일에 대한 열망 못지않게 사람들마다 자신에게 불리한 통일이 될까하는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이며 91년의 남북기본관계합의서도 북한이 이미 통일방안으로 ‘고려연방제’를 제의해 둔 상태에서 연방제가 아닌 국가연합제에 실질적으로 기울어진 느낌이 많아 북측에 부담을 주었고 남측에게도 연방제에 대한 논의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상계서 p.18

12) 6·15 선언 제4항은 “남과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중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13) 상계서 p.20

14) 상계서 n.21

다.15) 특히 백교수는 2005년의 두 행사의 성공적 평가에는 남북의 민중이 각자 힘닿는만큼 참여한데 있기에 진정한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데는 남북민중의 실질적 화해와 접근에 근거한 <민중대참여의 원칙>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16)

백교수의 「한반도식 통일」이 이미 진행중이라는 언급은 6·15 선언과 더불어 한반도 특유의 분단체제가 허물어지며, 한반도 특유의 통일과정이 본격화됨을 나타내며, 6·15 선언 이후 변화하는 남북한 관계를 설명하는데는 '분단시대'나 '통일시대'라는 양분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17) 백교수는 「1단계통일」을 남과북의 국가연합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남과북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 통합과정을 이루어가다보면 남과북 사이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관리하는 장치로서 국가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남과북의 국가연합을 유럽연합보다 더 느슨하여 화폐통합이나 이동의 자유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언어의 통일과 문화적 체질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며, 통일이 전제된 연합이라는 것이다.18) 나아가 백교수는 자신의 '제1단계 통일'이 6·15 시대를 연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5년 12월 노벨상수상 5주년 기념강연에서 화해·협력의 남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면 제1단계의 남북연합제의 통일체제에 들어서게 됨을 언급한데서 고무되고 있다고 쓰고 있다.19)

6·15 선언이 있는 지 6년이 지나고 있다. 백교수의 지적대로 「6·15 시대」라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6·15 선언 이전의 남북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르게 남북한관계는 빠른 속도로 변해왔다. 분단체제가 시작된 「1953년 질서」가 「2000년 질서」로 바뀌고 있으며 김대중정부의 대북 정책인 「햇볕정책」으로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녹기 시작하여 경직된

15) 상계서 p.21

16) 상계서 p.21

17) 상계서 p.34

18) 상계서 p.36

19) 상계서 p.37

「고체상태」의 분단체제가 「액체상태」로 바뀌어왔다.²⁰⁾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한 교류는 질과 양에서 괄목할만한 변화를 보여왔다. 우선 다방면의 남북대화가 지속되어 왔다.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장관급회담이 19회나 열렸고, 13회의 경추위회담이 개최되었다. 1회의 국방장관회담, 4회의 장성급회담을 비롯 각종 회담이 총 100회 이상 개최되면서 각 분야에서의 남북교류가 점차 정례화되고 확대되어 왔다. 장관급회담이 지속되면서 북한이 거론조차 부담스러워한 핵문제를 비롯 대량살상무기문제를 선언적이나마 논의하고 남북장성급회담에서는 서해상 함정간 상시통신망유지, 군사분계선 선전수단의 단계별 제거 등 민감한 군사사항을 협의하는 등 남북한 관계의 정치, 군사적 개선에 대한 희망을 높여주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²¹⁾ 북한의 입장에서 각종 회담은 경제성있는 공업제품을 비롯 물질적 지원을 남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상품'인 것이다.²²⁾ 장관급회담을 비롯 각종 회담은 북한이 남한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지원을 받는 창구인 셈이다.

둘째로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금강산 관광의 경우 98년 11월 실시된 이후 관광지 확대, 육로관광허용 등 전향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총 관광객수가 100만을 넘었다. 개성공단의 경우 총2천만평 개발 목표속에 2만 8천평의 시범단지 부지조성공사 완료 총 18개 이상의 남한기업이 입주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활발하게 개발되면서 「남북의 작은경제 공동체」가 형성됨을 내외에 보여주고 있다. 북한 당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의 최전방지역인 금강산지역과 개성지역을 개방하는 것은 외화획득과 남한주민의 대북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전략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개방은 군부를 비롯 북한의 보수적 입장을 가진 세력

20) 김영수,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변화 평가와 발전방안" -정치·외교·안보분야 지정토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평화나눔센터 주최 제6차 정책토론회 (2006.6.13)자료집, p43

21) 신성호, "북한체제의기와 한국의 대북정책", 하영선편, 「21세기 한국의외교대전략」, 서울 EAI 2006 p.292

22) 전현준, 전계서 p.7

들에게는 개방의 부작용을 두려워하고 있어 종종 남북경협을 진척을 막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 대표적 예가 2002년 6월의 <서해교전>이며 남북간 철도공사가 완료되어 개통 및 시험운행을 합의한 후 그 행사를 하루전에 북한이 군사보장 미흡과 남한의 정세를 이유로 무기연기 시키는 일도 마찬가지다. 사실 남북이 철도연결 시험운행을 합의하자 남한에서는 통일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 분위기였다. 철마가 분단의 철조망을 뚫고 북한지역으로 달려간다는 것 자체가 통일이 다 되었다는 상징적 생각을 하기 충분했기에 철도연결 취소는 남한주민들에게 최근의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한 냉정한 인식을 갖게 했다.

셋째로 남북한의 인적, 물적 교류가 날로 증가되어 왔다. 2005년 1년에 남한주민 8만 7천여명이 북한을 다녀왔으며 방문의 목적도 지원, 학술사업, 관광 등 다양해졌다. 교역 역시 확대되어 2004년 7.2억달러로 북한 총 대외교역 규모의 4분의 1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며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남한이 북한의 두 번째 교역상대국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6·15 선언 이후 6년이 지나면서 교류와 협력의 진전은 남북한 사이의 실질적 협력관계의 구축의 토대가 공고히 다져지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남북한 관계의 변화를 백교수는 <한반도식 통일>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이렇게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데 있어 가장 큰 동력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로 이어져 온 「대북화해·협력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먼저 북한을 더 이상 한국전쟁의 연장선상에서 타도할 대상으로만 파악해서는 안되고, 경제난에 처해 있는 북한이 붕괴되거나 급격한 흡수통일로 인해 치루어야 할 남한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비용이 지금 현재 남한의 능력과 상황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현 정권 및 체제유지가 남한에 유리하며 북한을 점진적으로 개혁·개방하도록 지원하여 낙후된 경제를 재건하도록하며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여 평화공존의 길로 남북한이 함께 가자는 것이다.²³⁾

남한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까지 후원하면서 경제·사회·문화교류 확대에 힘써왔고, 지금까지의 노력은 경제적으로 3조 2300억원(약34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북한의 1년치 예산이 25억달러보다 많은 비용이다.²⁴⁾ 한편 남한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와 정책이 현실성과 타당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북한의 대남정책이 이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낙관적 전망을 보장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다시말해 남한정부가 추구하는 평화와 번영은 북한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체제의 중국 내지는 베트남식 개혁-개방정책으로 나타나야 가능하다.

「6·15 선언」 이후의 북한이 전개한 대남정책을 살펴보자²⁵⁾ 우선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제의에 응한 배경은 정치적 의도없이 순수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였다. 한편으로는 남한을 혁명의 대상에서 공존의 대상으로 바꾸는데는 한반도 상황을 '미국 대 조선반도'의 대결로 규정하고 대미항쟁에 남한을 끌어들이는 전술도 내재되어 있다. 그러기에 북한은 남한의 대북경제지원의 대가로 '남한을 미국에 의한 한반도 전쟁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있다'는 논리까지 내세우고 있다.

둘째로 북한은 당국간 회담을 비롯 각종회담과 이산가족상봉을 비롯 학술·종교·언론·예술 분야의 교류를 대가로 일정한 비용을 획득하는 「받고 주기식」 거래를 해 왔다. 각종 분야의 회합시 남한은 행사경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으며 남한주민의 북한방문도 그 비용의 대부분을 방문자가 대고 있다. 북한은 이를 「민족공조」 또는 잘 사는 남한동포의 당연한 의무로 치부하기도 한다. 결국 남북관계의 개선은 남한이 부담하는 비용과 비례한다는 설명이 된다.

셋째로 북한은 6·15 선언 이후 남북관계에 있어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정치·이념·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나머지 분야와 불균형을 이룰 정도로 미흡하다. 이른바 북한이 제기해 온 “근본문제”인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북미평화협정, NLL 재설정 등을 관철하기 위해 지

24) 최원기, 「핵 방아쇠에 손을 쥔 김정일」 「중앙일보」 2006.8.7

25) 이 부분은 전희주, 저서서, pp11-15까지를 8약했음

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다. 이 문제가 북한의 요구대로 해결되어진다면 남한의 상황과 남북한 관계는 남한의 보수주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조성됨을 뜻한다. 이 부분이 북한이 남한을 진정한 동반자로 인정하고 있느냐하는 의구심을 갖게하는 요소가 된다. 그동안 북한이 간헐적으로 보여준 합의사항의 불이행과 6·15 선언의 합의사항인 김정일 위원장의 남한답방 미이행 등은 남한 주민들의 북한 불신이나 경계심을 갖게하는 요인이되고 있다. 따라서 6·15 이후 남북한 관계는 경제적으로 북한이 남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협력도 증진되어왔고, 통제사회인 북한주민의 대남경계 인식이 상장정도 완화되어있으나 정치·군사분야의 신뢰구축은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어 남북한 관계의 불균형적 발전이 현실인 것이다.

IV.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위기의 「6·15 시대」

북한의 경제난은 1970-80년대를 거쳐 1990년대에 심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탈북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른바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체제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 위기에서 체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 「6·15 시대」를 여는데 큰 배경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고자하는 체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국가로서의 북한은 정치적으로 공산당 일당 독재이며, 경제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구소련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라기보다는 「김일성」 국가 내지는 김일성 통치가 승계된 김정일 체제가 핵심이다. 따라서 북한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을 절대적 지도자로 옹호되는 수령보위체제인 것이다.²⁶⁾

북한은 수령보위체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발전보다는 선군사상과 핵과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우선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최대의 목표인 선군을 통한 김정일 체제의 보위와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포기와 이를 통한 중국식 내지 베트남식 개혁-개방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군의 통제와 무력에 의지하는 선군정책을 우선시하면서 경제회복을 부차적으로 보기에 남한과의 교류협력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어가는데 근본적 장애가 되고 있다. 나아가 북한핵 무기 보유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과 대결상태를 고조시키게 되는 것이다.

지난 7월 5일 북한은 단거리에서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를 실시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남한정부에 의해 사전에 포착되었다. 미국과 일본은 이를 안보상의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중국, 러시아까지 협력하여 실험발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남한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지난 「6·15」선언 6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북측대표단에게 미사일 실험발사를 중지 할 것을 촉구했고, 발사시 남한정부의 대북지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고까지 했다. 그러나 북한은 발사라는 강수를 두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만장일치의 유엔의 안보리결의를 통해 대북비난 및 제재 결의를 했고 남한정부도 부산에서 개최된 15차 장관급회담에서 쌀과 비료 지원을 보류하는 강한 조치를 나타냈고 북한대표단은 이에 격한 반응을 보이며 예정된 일정을 하루 앞두고 돌아갔다. 그 후 북한은 예정된 이산가족상봉행사를 취소하는 등 남한정부에 「민족공조」를 포기하고 「국제공조」에 나선 배신적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남북한관계는 경색되어가고 있다. 백교수는 이 책에서 한반도 군사상황은 전쟁으로 치달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한반도에서는 핵무기까지 동원되는 대규모 전쟁의 위협이 너무도 절실하기 때문에 산발적 국지전이나 한정된 보복전쟁이 벌어질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북쪽에서 적화통일을 위한 남침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진 지 오래임은 물론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무력으로 북한을 공격하려 해도 남한의 초토화와 주한미군의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할 형편”²⁷⁾이기에 군사적 모험은 어느쪽에서나 가능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백교수의 희망적 판단과는 달리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향후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 평화정착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은 금융제재를 비롯한 미국의 압박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벼랑끝 전술'의 첫 번째 반응이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결의를 등에 얹고 더욱더 북한을 압박해 갈 것이다. 그러면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의 제2, 제3카드를 내놓을 것이고 아마도 '핵 관련' 수단이 채택될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됨을 뜻하며 동북아시아는 군비경쟁에 뛰어들게 될 것이다.

이미 일본은 미사일 발사 후 '선제공격'론이 제기될 정도로 군비증강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중국, 대만 등도 군사력 증강에 주력하게 된다. 남한의 경우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는 중·장거리만이 아닌 단거리인 스커드미사일이 포함됨으로써 남한땅과 4500만 주민 모두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있음을 자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6·15 선언 기념행사차 남한을 방문한 북측인사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한반도가 전쟁화염에 휩싸일 것"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남한사회에서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여론도 두 갈래로 나뉘지게 되었다. 또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남북한간의 군사적, 외교적 균형은 북한이 우위에 서 있게 됐다는 것이다. 핵과 미사일을 가진 북한과 이를 갖지 못한 남한 사이에서 이제 북한의 「민족공조」론이나 「우리민족끼리」주장은 남한사회에서 설득력을 잃는 결과를 안겨주고 있다. 아울러서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는 남한정부와 민간단체에 대한 신뢰감도 손상되는 결과를 안겨주었다.²⁸⁾

이러한 현실은 6·15 선언 이후 지난 6년을 다시금 뒤돌아보게 하고 있다. 교류와 협력은 괄목할만한 발전이 있었다고 해도 남북사이에 신뢰할만한 평화장치가 아직도 마련되지 않은 남북한관계의 불균형 성장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갈까? 하는 과제가 「6·15」시대의 앞길을 가늠

28)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그동안 북한의 인도적 사업을 펼쳐 온 적지않은 인사들에게 곤혹감을 주었으며, 대북정책에 대한 조정내지는 재검토의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 2006.7.24

케 하는 요인으로 남겨 있는 셈이다.

V. 다시 「6·15」선언으로 돌아가는 길

백교수는 저서에서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로
운 세력이 많기 때문이다. 일본의 보수세력 상당수가 그럴것이고 부시행
정부의 입장에서도 긴장유지가 너무나 달콤한 바가 많다.”고 언급하고
있다.²⁹⁾ 또한 “한반도의 경우 혼란에 휩쓸린다는 것은 곧 전대미문의 재
앙을 의미한다. 북에 핵무기가 있건 없건 남북한 모두 극도로 무장한 상
태이며 미국으로 말하자면 인류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각종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한 채 핵무기의 사용마저 불사할 태세임을 이미 공언한 바
있다. 그만큼 한반도가 위험한 지역인데 동시에 천하대란기의 혼란을 국
지적으로나마 통제하고 다른 길을 찾아나설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곳이
기도 하다.”³⁰⁾ 면서 이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제
시하고 있다.

첫째로, 백교수는 「민족공조」와 「한미동맹」 둘 다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미국에는 「전쟁공
조」는 안되며, 북한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대북추종」은 있을 수 없다
는 것을 남한에 있는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³¹⁾

둘째로, 남한의 시민사회가 다각적인 대북민간교류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15선언 이전에도 남한 민간단체의 북한지원 활
동은 있었으나,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져 온 것은 6.15선언이 촉매가 되
었다. 지난해부터 정부차원의 인도적 지원이 전개되고 있지만 그 동안
긴급구호 활동에서부터 개발지원에 이르기까지, 남한의 민간단체의 역할
은 대단히 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 교류에도 민간단체들이 적
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교류와 협력이 정부가 나서서 할수

29) 백낙청, 전계서 p.236

30) 상계서 p.234

31) 상계서 p.234-235

없는 분야를 찾아나서서 더욱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로, 백교수는 통일과 직접 관련이 없는 듯 보이는 남한사회의 제 반개혁작업을 적극 추진함이 '제대로 된 통일'의 필수요건을 갖추는 것이 되며 이는 분단체제의 반 민주성을 극복하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³²⁾

넷째로, 백교수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 당국에게 정책적 조언을 하고 있다. 우선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개혁조치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대결 일변도로 가는 것은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보고 있다. 화해·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는 남한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을 훼손시키는 일도 삼가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³³⁾

앞에서 다루었듯이 북한과 미국의 대결이 고조되고 있는 정세는 한반도 분단극복을 위한 그 동안의 진전을 되돌릴 위험성도 안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남북한 당국과 주민 모두가 2000년 6월 남북의 정상이 전세계를 향해 보여준 화해와 협력의 메시지를 다시금 실천의 지표로 삼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용기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한다. 그것만이 백낙청 교수가 제시하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에 충실하는 길이 아닌가 한다.

32) 전개서 p.169

33) 상계서 p.170